

2023. 11. 20(월)		사진: 유 / 문	쪽수: 3쪽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1월 20일 09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보도자료	 대한건설정책연구원		
	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, 13층(신대방동, 전문건설회관)		

< 자료문의 > ☎ 02-3284-2600, 대한건설정책연구원 ([ricon@ricon.re.kr](mailto:ricon@ricon.re.kr)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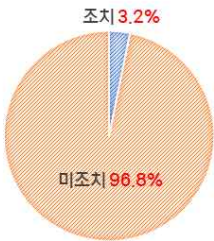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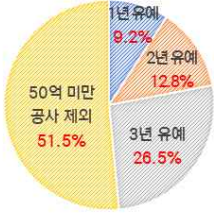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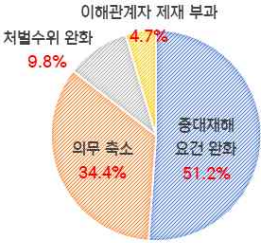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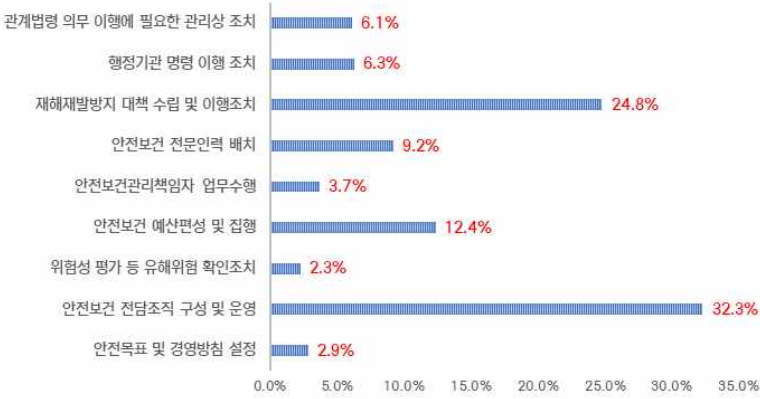
## 전문건설사 96.8%, 「중대재해처벌법」 대응 미흡

- 최소 2~3년 적용 유예, 지원방안 모색과 함께 실정에 맞게 법령 개정 필요-

- 2년 유예기간을 거쳐 '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(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) 사업장까지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이 적용될 예정입니다.
- 이에 대한건설정책연구원(원장 김희수)은 대한전문건설협회(회장 윤학수)와 함께 「중대재해처벌법」 대응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- 근로자가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, 안전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, 전문건설사들은 아직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실제로 「중대재해처벌법」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, 인력·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취한 기업은 3.6%에 그친 반면, 응답기업 96.8%가 ‘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상태 유지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(그림 1 참조).
-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, 전문건설사의 준비가 미흡한 이유로 ‘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(67.2%)’, ‘비용부담(24.4%)’, ‘전문인력 부족(8.4%)’으로 파악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 영세한 전문건설사는 자본력과 인력의 한계 등에 부딪혀 무엇을,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- 따라서 전문건설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(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) 사업장에 대해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적용대상 제외(51.5%)하거나 3년 유예(26.5%)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(그림 3 참조).
- 아울러 사망자 2명 이상으로 중대재해 요건 완화(51.2%), 안전보건의무 축소(34.4%) 등의 법률 개정이 있어야 법 준수를 통한 재해예방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(그림 4 참조). 특히, ‘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’(32.3%), ‘재해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(24.8%)’, ‘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(12.4%)’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영세한 기업의 실정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(그림 5 참조).
-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은 모호한 규정이 너무 많고 외부의 단기 지원만으로 전문건설사가 의무이행을 하는데 어려우므로 최소 2~3년은 법 적용을 유예하고, 안전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과 함께 영세 기업 실정에 맞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

붙임: 781곳 전문건설사 설문조사 결과

 <table><tr><td>조치</td><td>3.2%</td></tr><tr><td>미조치</td><td>96.8%</td></tr></table>	조치	3.2%	미조치	96.8%	 <table><tr><td>인력부족</td><td>8.4%</td></tr><tr><td>비용부담</td><td>24.4%</td></tr><tr><td>방대한 법 의무와 애매함</td><td>67.2%</td></tr></table>	인력부족	8.4%	비용부담	24.4%	방대한 법 의무와 애매함	67.2%								
조치	3.2%																		
미조치	96.8%																		
인력부족	8.4%																		
비용부담	24.4%																		
방대한 법 의무와 애매함	67.2%																		
그림 1. 「중대처벌법」 대응조치 여부	그림 2.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준비 미흡 사유																		
 <table><tr><td>1년 유예</td><td>9.2%</td></tr><tr><td>2년 유예</td><td>12.8%</td></tr><tr><td>3년 유예</td><td>26.5%</td></tr><tr><td>50억 미만 공사 제외</td><td>51.5%</td></tr></table>	1년 유예	9.2%	2년 유예	12.8%	3년 유예	26.5%	50억 미만 공사 제외	51.5%	 <table><tr><td>이해관계자 제재 부과</td><td>4.7%</td></tr><tr><td>처벌수위 완화</td><td>9.8%</td></tr><tr><td>의무 축소</td><td>34.4%</td></tr><tr><td>중대재해 요건 완화</td><td>51.2%</td></tr></table>	이해관계자 제재 부과	4.7%	처벌수위 완화	9.8%	의무 축소	34.4%	중대재해 요건 완화	51.2%		
1년 유예	9.2%																		
2년 유예	12.8%																		
3년 유예	26.5%																		
50억 미만 공사 제외	51.5%																		
이해관계자 제재 부과	4.7%																		
처벌수위 완화	9.8%																		
의무 축소	34.4%																		
중대재해 요건 완화	51.2%																		
그림 3.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	그림 4. 「중대재해처벌법」 개선방향																		
 <table><tr><td>관계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</td><td>6.1%</td></tr><tr><td>행정기관 명령 이행 조치</td><td>6.3%</td></tr><tr><td>재해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</td><td>24.8%</td></tr><tr><td>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</td><td>9.2%</td></tr><tr><td>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</td><td>3.7%</td></tr><tr><td>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</td><td>12.4%</td></tr><tr><td>위험성 평가 등 유해위험 확인조치</td><td>2.3%</td></tr><tr><td>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</td><td>32.3%</td></tr><tr><td>안전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</td><td>2.9%</td></tr></table>		관계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	6.1%	행정기관 명령 이행 조치	6.3%	재해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	24.8%	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	9.2%	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	3.7%	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	12.4%	위험성 평가 등 유해위험 확인조치	2.3%	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	32.3%	안전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	2.9%
관계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	6.1%																		
행정기관 명령 이행 조치	6.3%																		
재해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	24.8%																		
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	9.2%																		
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	3.7%																		
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	12.4%																		
위험성 평가 등 유해위험 확인조치	2.3%																		
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	32.3%																		
안전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	2.9%																		
그림 5. 영세 기업에 맞게 보완해야 할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의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																			